

## 18차 장관급회담의 의의와 과제

### 조 한 범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18차 장관급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상황에서도 남북관계개선과 당국대화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남북자·국군 포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협의와 향후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상징적인 인도적 사안이자 당사자들의 고통화를 고려했을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의무사안이었다. 정부의 해결의지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의 미해결상태의 지속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제기되는 국내 비판 여론의 근거이자, 정부의 부담이었다. 따라서 금번 장관급회담에서 동 사안이 공동보도문에 삽입된 점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2월의 7차 적십자회담에서 남북자와 국군포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남북이 협의·해결한다고 합의한데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현재 남북당국 간 최고위급 회담인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남북자·국군포로문제가 삽입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단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실무급회담의 개최가 예상되는바, 동 문제에 관한 상징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 해결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측이 제안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안과 민족공동의 자원개발안이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개발사업에 이어 금번 합의는 새로운 남북경협모델의 창출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강하구공동이용안의 경우 골재채취라는 경제적 목적과 아울러 정전협정상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지역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이라는 평화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민족공동자원개발문제의 경우 공동보도문에 구체적으로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천지역이 또 하나의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천에는 검덕 아연 광산과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있고 금, 은, 몰리브덴 등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단천 개발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 남북경협의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단천 개발을 통해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통해 낙후산업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합의는 상징성과 아울러 남북대화의 안정적 기반확보에 있어서 주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핵국면의 지속상황에서 김전대통령의 방북은 북핵관련 돌파구 및 남북정상회담 등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체제안정과 경제위기해소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바,

김 전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대규모의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간접적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차 장관급회담은 교류협력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일정 등 군사적 신뢰구축문제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는 한반도평화의 제도화에 있어서 전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합의된 남북철도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서해공동어로구역설정 등 남북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요 이유는 관련 군사당국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군부의 강경한 태도와 아울러 북한이 군사적 사안을 남북대화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향후 ‘안보와 교류협력의 비대칭성’이라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한은 실리추구적 자세를 견지해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의 재개 및 관계 개선 대가로 대북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실리를 추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취해왔다. 대일본 수교과정에서 납치자를 송환한 것은 북한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가 실용적 회담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바, 남북자 국군포로 송환에 있어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8차 장관급회담의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합의는 추상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현과정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바, 향후의 남북대화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국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온바,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 ‘현안의 해결과 대북지원의 연계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대북개발지원의 본격화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남한사회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대북정책의 추진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을 방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대 국민홍보와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구체적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